

송·정·김 “내가 이재명 정부 성공·총선 승리 책임자”

8·17전대 여당대표 경선 마지막 TV토론

“진짜 여당”·“더 강한 개혁”·“유능한 여당” 강조
‘결과 승복’·‘전대 이후 당 화합’에는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책임자임을 강조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오는 주말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높은 호남과 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송영길 후보는 진짜 여당다운 여당을, 정청래 후보는 더 강력한 개혁을, 김민석 후보는 유능한 집권여당을 각각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래당 대표도, 조국혁신당 대표도 아닌 민주당 대표 후보 송영길”이라며 “민주당을 진짜 여당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6·3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저희에게 경고했다. 형식상으로는 이겼지만 내란 세력을 다시 부활시키고 대등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준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를 잘했다고 평가한다면 총선 승리는 쉽지 않고 과반 의석도 무너질 수 있다. 총선 필수 카드 송영길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더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했고 상법 3차 개정을 통해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원과 함께 이룩한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또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운 상승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기간 여러차례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전대가 끝나면 당을 하나로 잘 화합시켜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의 길을 이끌겠다”며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광주의 메가 프로젝트는 초고속으로 성과를 내고 전북도 책임지고 독자적인 메가 성장 플랜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와 서울 강북처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서도 정상화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 후보는 번갈아 가며 질문과 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부터)·송영길·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변을 이끄는 수도권 토론에서 상대를 공격하며 차별성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하자 “최소하지만 정 후보가 다시 여당 대표를 맡으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율이 흔들려서 기업에 안심을 주거나 국정을 안

정시키는 면에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서로 낙선해도 당선자를 돕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당선되면 돕겠다면서 제가 당선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최대 제로로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서남권의 공중방어전략 공백을 채우고 미국과 일관히 협의하는 추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공급을 꼽았다.

송 후보는 정 후보가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가 국

무회의를 통해 공식 확정된 123개에 대해(집권여당 대표가) 인식이 없다는 게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송계문이 국보 1호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정과제 50호는 무엇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뭇을 놓고 퀴즈하는 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전략과 관련해 4대 그룹 총수와 면담해 보거나 미국 AI 기업과의 합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정 후보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 현상이 심한 것 같다. 비공개로 만난 것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세 후보는 이처럼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전대 결과 승복과 전대 이후 당 화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당연한 얘기’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사회자가 주재한 이벤트 공통질문에서도 세 후보는 각각 다른 답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만찬 초청 시 누구와 동행하겠느냐’는 질문에 정 후보는 “아들 셋 키우느라 고생한 제 아내를 초청하겠다”고 답했고, 송 후보는 “표적수사로 고초를 겪은 감옥 최고위원 후보를 데려가 위로해주고 싶다”고 했으며, 김 후보는 “정 후보와 가겠다. 저희끼리 풀어야 할 일도 있고(누가 당 대표가 되든) 당을 잘 끌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신정훈 “호남 반도체, 인력양성·일자리 함께 가야”

김영훈 장관 “4000명 양성…지역 선순환 생태계 구축 중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사진)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지향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지역 인력양성 체계 구축과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전격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호남 반도체를 추진하는 노력과 의지가 눈물겹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공장 건설 단계부터 인력양성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양성 역시 국가가 구축해야 할 핵심 인프라”라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동신대, 목포대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지역대학과 교육·훈련 기반을 연계해 펌 건

설부터 운영까지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를 지역 일자리와 청년 정착·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생태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호남권에서 최소 4000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불법전화방 의혹…정청래 측 공작·허위사실”

전진숙, 국회서 회견…與선관위 ‘불법 전화방’ 신고 기각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사진)은 12일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후보에게 “최측근 인사들이 벌인 치졸한 함정 전화 정치공작의 실체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 캠프가 ‘북구을지역위원회가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며 녹취록을 근거로 당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포한 녹취록과 사태의 전말을 확인한 결과 이는 정 후보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해 음해를 목적으로 설계한 악의적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작 정치로 가짜뉴스 유포한 허신학, 이진련 등 관계자들을 즉시 캠프에서 해임시키고 중앙당 윤리위에 자진해서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정 후보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청년은 전남광주 북구를 지역 거주 김민석 후보지지 청년자원봉사자로 지지자



의 일상적인 선거운동을 불법 전화방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당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청년 본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린 것이라는 해명이다.

공직선거법과 판례가 금지하는 불법 전화방(유사기관)은 별도의 전용 공간을 임대하거나 별도의 통신 회선·장비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를 뜻한다.

전 의원은 “개인 휴대폰으로 자발적 봉사를 한 청년을 향해 자국적인 주홍글씨를 씌운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녹음파일은 정청래 후보 최측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벌인 함정 취조였다”며 “해당 통화는 청년 자원봉사자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거문도 근대유산, 영국 기록으로 되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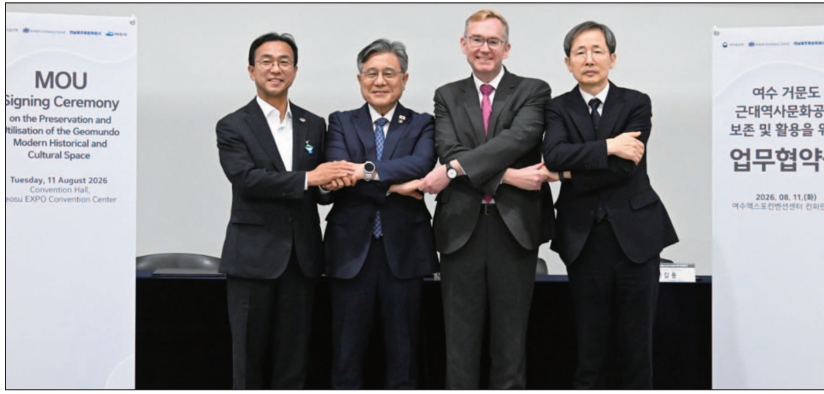
주한영국대사관과 업무협약
공공외교 분야 교류와 협력
최초 해저통신시설 등 파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국가유산청, 여수시, 주한영국대사관이 영국에 남아 있는 역사자료를 토대로 여수 거문도 근대유산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힘을 모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여수에서 국가유산청, 여수시, 주한영국대사관과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거문도가 지닌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고 사업 방향 검토, 조사·연구와 홍보 등에 협력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여수시는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여수에서 국가유산청, 여수시, 주한영국대사관과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축제와 전시 등을 기획한다.

주한영국대사관은 거문도 사건과 관련된 역사·고증자료를 제공하고 공공외교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나선다. 협약에 앞서 진행된 사전 고증조사를 통해 그동안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문도 관련 자료도 다수 확보됐다.

박진석 경남대학교 교수가 영국 국립공문서관과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자료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과 해저통신시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됐다. 거문도 주민과 영국군 사이에 체결된 토지 임대차 계

약문서 등 당시 주민 생활과 영국군 주둔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확보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롭게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거문도 근대유산의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여수 거문도 종합정보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는 사전 고증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거문도 근대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12일에는 국가유산청장과 주한영국대사 등이 거문도 근대유산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택공급·금융대책 발표…모듈러 방식 과감한 공급”

정부·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

“9·7대책 공급법안, 8월에 반드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기로 하고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덕원 금융위원장,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1차 회의

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내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 공급 법안과 금융위의 금융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면서 “중앙·지방

정부, 국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9·7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8개월 넘도록 국회의원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들이 8월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정부 측에 지난 3일에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등 우려를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제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며 “금융 부분도 실수요자들의 걱정들을 실제로 해소할 포인트가 정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